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28.(금) 09:30 < 11. 28.(금) 석간 > 배포 2025. 11. 27.(목)

우리의 심장 첨단 항공엔진 개발,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 개최 -
- 부처별 중복투자 방지 및 개발 단계별 주요 현안 주기적 논의 계획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이하 방사청),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 국방부(장관 안규백) 등 관계부처는 11월 28일(금)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대표적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외기업에 지급하던 막대한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방사청은 국산 첨단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인력 양성과 시험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 생태계 조성 등 전 주기에 걸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산업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등 관계부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협의체를 활용해 부처별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 단계별 주요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선혜 산업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은 “산업부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첨단 항공엔진의 기술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항공엔진 제조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협의체가 우리 항공엔진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인증수행 및 국제협력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군수용 인증 지원은 물론, 민수용 인증도 병행하여 상용화와 해외수출의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발과 인증이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준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 직무대리는 “첨단 항공엔진은 군용을 넘어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인 만큼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향후 민수 엔진 개발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항공엔진 개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광병 우주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우주청은 국가 항공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민간 항공엔진 개발의 주무부처로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민수 항공엔진 분야까지 확장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선혜 (044-203-4150)
		담당자	사무관	민승기 (044-203-415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책임자	과 장	최승욱 (044-201-4284)
		담당자	사무관	이재석 (044-201-4291)
	방위사업청 미래도전기술사업팀	책임자	국(부) 장	代정재준 (02-2079-4100)
		담당자	과(팀) 장	권선아 (02-2079-4130)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	책임자	과 장	이광병 (055-856-5410)
		담당자	사무관	김경국 (055-856-54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